

김민석 “정청래, 자기정치 폐해”… 당권 경쟁 첫날부터 직격

“합당·공천과정서 숙의절차등 부족
공정한 시스템 공천 복원하겠다”
정청래, 네거티브 선거전 근절 선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당 대표 출마선언에서 지난 1년간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출마선언을 들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며 김 전 총리가 먼저 네거티브 선거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간접 비판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당 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3인방(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에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5·18민주화운동 단체 대표단과 청년 당원 20여명과 광주 전남통합특별시 소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계몽군의 활기적 흔적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245를 찾아 당 대표 선거 출마 이유를 밝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했다.

김 전 총리는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 체제 민주당을 두고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국정성공도 총선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시절의 민주적 당 운영방식을 부활시켜 숙의와 토론을 살릴 것이다. 훼손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 회복 작업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 그러나 결과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윤리”라며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저는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오전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었던 이번 호남 지역 공천이 아쉬웠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호남뿐 아니라, 이곳저곳 일관성과 원칙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천에 관한 토론과 혁신의 틀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후에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오전과 같은 내용으로 출마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선언문에서 지적인 자기정치의 폐해'의 예로 "토론과 숙의 절차 부족의 예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검찰개혁 논의, 공천, 기타 등등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네거티브를하지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글에서 “김대중을 존경하는 사람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과 함께 12·3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낸 사람들이 똘똘 뭉치자”며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네거티브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정 전 대표의 입장을 두고 “출마선언에서 한 마디도 네거티브하지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는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윤리위 연 국민의힘… 친한계 징계 두고 공방

당권파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
친한계 “표현의 자유 반하는 처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 당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구갑 선거 지원에 나선 친한계 의원들과 장 대표의 공개 사퇴를 요구한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접수된 징계 요구안이다. 앞서 윤리위는 친한계 배척진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는 ‘탈당 권유’ 중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으나,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는 사실상 무효화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당권파 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밀려드는 만큼, 아무런 조치 없이 사태를 묵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 징계 문제는 당헌과 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행위 징계 문제는 당이 연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

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TN 라디오 ‘장성철의뉴스명당’에 출연한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라는 것은 당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사유가 없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목적을 두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는 당 대표 비판에 대한 징계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오히려 징계를 추진하는 세력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비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한다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이 출마했던 부산 북구갑 선거 관련해서는 “한 의원의 선거운동 방

식이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의원들도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의 상당수 당원이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징계를 잡내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며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를 위한 윤리위 소집에 대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리위를 열고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국민의힘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라



장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징계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되고 징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타격”이라며 “지금의 지도부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징계 전력이 있다면 공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제3자” vs “야당”… 선관위 특검 추천권 놓고 여야 대치

민주당 “공정성 기준으로 설계”
국힘 “그동안 야당 배제하고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쥐야 한다는 민주당과 야당에게 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을 두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검)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통해 선거사무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선관위 특검법은 이번주 내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령 정비로 제도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궤변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수사범위도 이번 사태와 선관위 내부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 야말로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 민주당이 했던 특검대로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대특검으로 버티다면 결국 국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홍 기자

정무위, 흠플러스 사태 진상규명 나선다

원구성 반대 국힘 의원들 불참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차원의 흠플러스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이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흠플러스 청문회 개최 요청 발언을 듣고 “흠플러스 청문회는 야당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7월3일 서울회생법원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을 통한 신규자금 2000억원의 조달 실패로 흠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10년간 배

당, 자산 매각 등으로 5조원이 넘는 현금을 회수한 MBK파트너스가 정작 회생을 위한 자금 조달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역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약탈적 금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해제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경매가 즉시 가능해지는 초비상사태”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법원이 부여한 유예기간은 단 2주 뿐이다. 2000억원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흠플러스는 돌이킬 수 없는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며 “흠플러스 직영 직원이 1만2000명이요 협력업체, 입점 상인,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고용인원이 무려 10만명에 이르는 민생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태홍 기자